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정문희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추진배경 및 방향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이 2019년 종료되면서 올해 초 향후 5년간(2020~2024) 국가 경관관리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이 발표·시행되었다.

「경관법」 제6조에 의해 5개년마다 수립되는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우수한 국토경관 형성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 성격의 국가계획이다. 경관정책의 중기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이면서 중앙·지방 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계획이기도 하다.

지자체 중심의 경관 형성과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었으나 이후 경관시책의 실효성과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방향 제시와 역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면서 2014년 「경관법」 제6조에 국가에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기게 되었다.

2015년 발표된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지난 시절 국토의 난개발 등으로 훼손된 우리 국토 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으로 재현하고, 주민이 국토 경관을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비전 삼아 2대 목표, 3대 추진전략, 총 8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제1차 기본계획은 국토경관헌장 발표와 국민 참여 공모전 개최 등 경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것은 물론 경관행정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민간전문가 참여 근거 마련 등 경관행정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 바 있다. 반면에 선행적 성격의 기초 연구 및 기술 개발의 저조로 기반구축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으며, 국민 체감도와 경관 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관사업 추진이나 선도모델 개발이 미진하여 경관관리의 내실성

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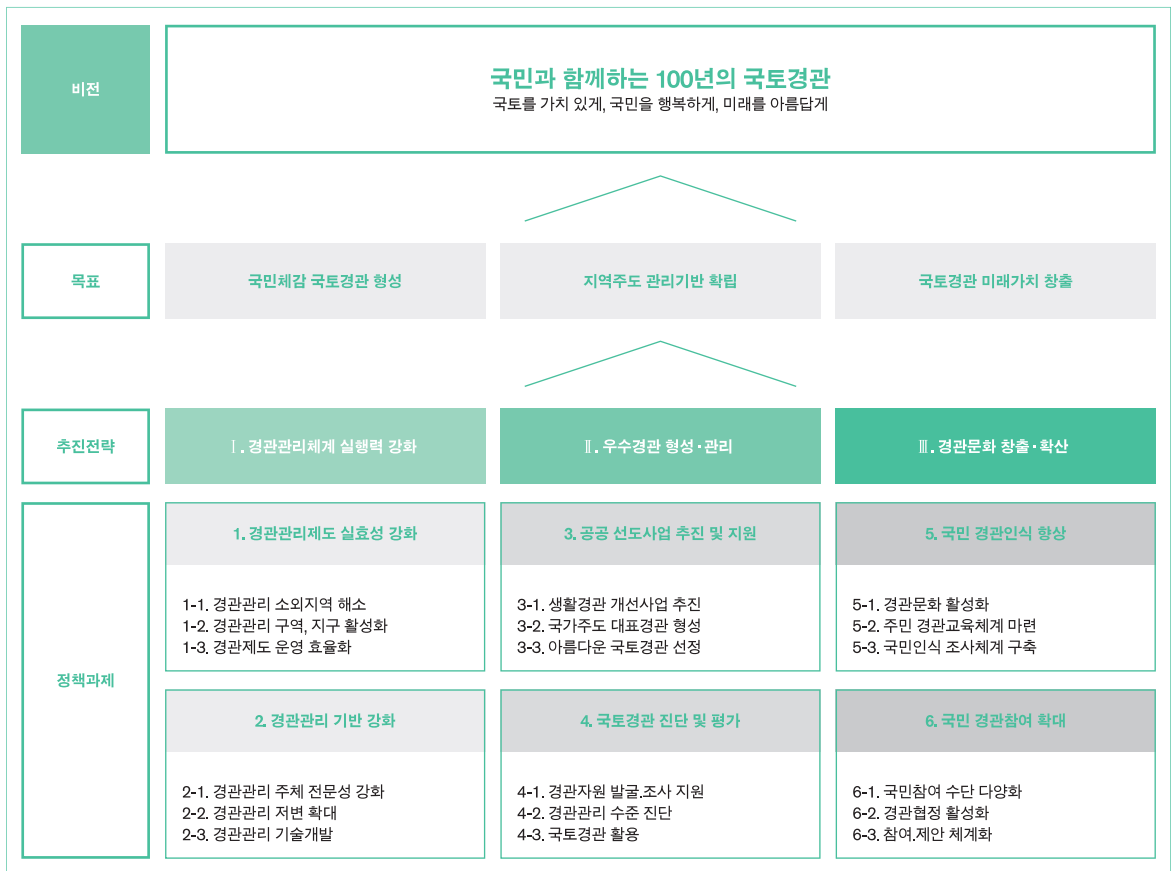
최근 농·산·어촌 지역의 경관 방치현상 발생, 산업단지·SOC 시설의 노후화 가속 등 비도시 지역의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하면서 경관 형성·관리에 있어서도 3차원 기술의 활용이 요구되는 등 국내외 국토경관 환경 여건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결과와 국토경관의 정책적 또는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다소 미진하던 경관정책의 실행력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되었다.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당초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총 15년에 걸쳐 3단계 추진으로 계획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이 초기 기반 구축 및 정착 단계였다면, 제2차는 중기적 내실화와 활성화 단계인 만큼 제1차 기본계획을 이어받아 안착시키고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삼았다. 이에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유지하고 3대 구체적 전략과 6개 정책과제, 18개 실천과제 등 중기 집중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산·어촌 및 접경지역의 지역 쇠퇴 가속화와 도시 중심의 경관관리로 인한 비도시지역의 관리소외 현상에 주



목하여 비도시지역이 국가 경관정책에 의해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인력·기술·산업 등 운영 기반을 확충하는 등 경관관리체계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민이 체감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나 수단·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국토 경관의 조사·진단 및 평가를 병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경관을 형성하고 관리되도록 하였다.

그간 다양한 홍보와 조사를 통해 국민 인식은 환기하였으나 공감대 형성 등 인식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민인식 향상 및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경관문화 창출 및 확산을 도모하는 등 전략별로 각 2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각 정책과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관관리제도 실효성 강화’는 비도시지역 등 경관관리 소외지역을 특별별로 특정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등으로 관리하는 한편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경관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경관심의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지침을 개선하고 사전검토와 공동심의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정책적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다음으로 ‘경관관리 기반강화’는 경관행정 교육내용을 고도화하고 지역경관센터 설립 등 전문 행정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관리기반을 강화하고,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와 같은 미래형 기술개발과 관리방안 연구도 적극 시행하여 국토경관에 대한 미래상과 가치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공 선도사업 및 지원’은 공공이 주도하여 국민 일상생활 경관과 국가 주요 SOC시설, 중점경관관리구역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경관자원 시범조사 실시 및 대표 경관 선정 등을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활용사례(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3)
출처: 국토교통부. (2020). 농·산·어촌, 산업단지, 접경지역을 국민과 함께 ‘100년 국토경관’으로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일 보도자료.



2019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꾸미기 공모전 개최 (2018년 최우수-전남 영광 영광천)
출처: 행정안전부. (2019).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하천은 어디?. 2019년 4월 1일 보도자료.

통해 우수 경관의 형성과 관리·활용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토경관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지역 행정·경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경관 기초 데이터와 정보를 축적·공유하는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경관의 날 제정 등 문화행사와 함께 웹툰·게임 등 쉽고 재미있는 홍보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의 경관의식을 향상’시키고 주기적으로 인식조사를 벌여 국민 인식과 수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이 주체적으로 경관을 형성·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경관가꾸기운동이나 참여·제안시스템과 같은 참여수단을 발굴하고 공공지원 사업과 경관협정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국민의 경관참여 확대’와 함께 다양한 혜택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차후 계획

제1차 기본계획은 경관 전반에 대해 폭넓게 다루면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 반면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사업추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중기단계에 꼭 필요하고 집중해야 될 부분으로 좁고 깊게 가도록 손에 잡히는 전략과 과제들로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제2차 기본계획을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연구용역을 시행하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법」 개정 및 다양한 진흥정책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시범사업이나 문화행사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더욱 활성화하거나 발전시키고, 스마트 시대에 맞는 통합형(컨설팅, 통계, 참여, 제안 등) 경관 플랫폼 마련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제2차 기본계획이 종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되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에 힘쓰는 한편 지자체·관련기관·전문가와 끊임없이 고민하고 협력하여 더 나은 경관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공-선도, 주민-경관 형성·관리하는 국민 주체 경관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지역 맞춤형 관리전략을 기반으로 방치·훼손된 비도시지역 등 국토 전반이 조화롭고 품격 있게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제2차 기본계획을 발판으로 국토경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고, 국민과 같은 곳을 보고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형 정책’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